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기능중심 슬림한 청와대 만들것 공정혁신경제 통해 일자리 창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3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

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 행복 지표를 중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역동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복지 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윤석열 설전 양자 TV토론 합의

‘지상파 초청 토론회’ 형식 추가 토론 위한 협상 지속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13일 설 연휴 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컨텐츠담당인 박주민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대3 실무 협상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실무 협상단은 또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추가 토론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자 토론으로 합의한 이

유에 대해서는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중 의원은 “(다자 토론의 경우)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공식 법정 토론 3회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실무 협상단은 향후 다자토론이 추진되더라도 이날 합의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이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만큼 이번 달 안에는 두 후보가 정책, 현안을 두고 토론회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선대위 김성수 공보단 수석부단장·권혁기 부단장, 국민의힘 성일중 전주혜 의원과 황상우 전 KBS 앵커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안 “양자 TV토론은 기득권 야합...3자 토론을

심상정 후보 참여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3자 토론’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미지를 부각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당이 두 당 후보끼리 하는 양자 TV토론을 추진하고 있다. 3자 구도를 막으려 치졸한 단합을 하는 것”이라며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3자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으로 양당 후보만 TV토론을 추진한다니 속이 뻔하다. 한마디로 두당이 힘을 합쳐 안 후보의 상승기류를 막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서로 원수처럼 물어뜯고 싸우다가도 국민을 위한 개혁 바람이 불면 막는 적대적 공생관계이자, 낯고 후진적인 진영정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

다.

이 본부장은 “두 당은 국민이 만든 혁신과 변화의 3자 구도를 존중하고 기득권 토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3자 토론으로 당당히 불자”며 “두 당의 제안을 받은 해당 방송사도 국민의 알권리, 방송의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한 만큼 잘못된 TV토론은 거부해줄 것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과 (야권) 단일후보가 됐을 때 경쟁력을 종합하면 ‘3자 구도’에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국민 알권리를 위해 3자 구도 TV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물론 원내정당의 대선 후보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한다면 찬성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회의에서도 양당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신승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편수를 부리려는 바탕에는 안 후보 상승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토론에서 도덕성이나 실력을 안 후보와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후보 ‘일정 전면 중단 후 칩거’

선대위원장 등 일괄 사퇴키로

심상정 대선후보의 ‘일정 전면 중단 후 칩거’로 혼란에 빠진 정의당 선대위가 13일 주요 보직자들의 총사퇴를 결의했다.

정의당 선대위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심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뒤 장혜영 정책위의장과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참여하는 이른바 ‘3요인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와의 연락은 여전히 닿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는 전날 저녁 여영국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등 최소수 인사들에게 일정 중단을 통보하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칩거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현 선대위를 해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결정 주체인 심 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당 차원의 ‘쇄신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대위 해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대위 쇄신과 관련한 심 후보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 후보가 칩거를 끝낸 후 쇄신 구상을 들고 왔을 때 이를 곧바로 실행하기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왼쪽), 주철현 의원이 13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차담회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재명 특보단장 민형배·주철현 “지방선거 아닌 대선 집중”

광주·전남 득표율 90%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특보단장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전남특보단장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13일 “지역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90% 목표를 각 분야별로 특보단을 조직해 적극 뛰겠다”고 밝혔다.

두 특보단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광역단위의 지역현안을 챙겨 이재명표 공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광주는 공공화이전 특보단, AI발전 특보단, 전남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특보단, 농업 관련 특보단 등을 꾸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일각에서는 대선을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한다”면서 “우리의 활동은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대선이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활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어 “저희의 활동은 지방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수립만이 유일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며 “광주·전남 시민들의 요청과 열망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 확정 짓는 방식

으로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장을 맡은 호남특보단과는 별개로 활동하며 직속 기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직능·정책별로 구성된 특보단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이끌며 정책·공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두 특보단장은 “어느 지역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의 지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보다 압도적이지 않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예전의 지지를 회복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